

"文대통령이 재정 낭비해 위기대응 안전판이 망가졌다"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②/②

김기훈 기자

업데이트 2021.09.10. 17:39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청와대

☞ ①/②에서 계속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의 대화는 가계부채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이어졌다. 가계 부채가 남유럽 경제위기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만약 위기로 번진다면 정부나 기업 부문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기업부채로 화제를 옮겼다.

안심할 수 없는 기업부채

—기업부채의 상황은?

“기업부채는 총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DSR(영업이익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16년말 36.0%에서 2020년말 39.7%로 약 3.7%포인트 증가했다.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3.7%포인트로 낮은 편이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G5(주요 5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36.1%에서 42.7%로 6.6%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적게 늘어난 셈이다.”

/자료=BS credit statistics

—그렇다면 기업 부문은 안심할만 한가?

“문제가 좀 있다. 대기업을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내는 좀비기업들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8%나 된다. G5의 경우 평균 11% 이다. 즉 우리나라에 한계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좀비기업이다. 큰 기업들은 상황이 양호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

/자료=S&P Capital IQ

기업은 위기대응 안전판 아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왔을 때 파산한 가정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그나마 괜찮다고 해도, 가계 부문에서 경제위기가 오면 소비가 줄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해지면 기업도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 경제위기 때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공익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자신을 희생해가며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외환위기 직후에 보았듯이 경제위기가 오면 살아남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는 편이다.”

지난 9월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가계부채 위기가 오면 파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나?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그 파장이 대기업에도 미칠 수 있다. 그 때는 총체적 위기가 온다. 그러니 가계부채 위기 때 기업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들

조경엽 실장은 이 대목에서 작심한 듯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 친노조 반기업 정책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세계화를 내건 미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켰다.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블룸버그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한국으로는 안 들어오고 동남아로 가고 있다.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으니

투자하기를 꺼린다. 그러니 청년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이 안되고 젊은층들도 빚을 내 생활한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가게 부실이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들의 빚이 탕감될 수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지 않은가? 일자리가 없는 저임금 근로자나 청년들에게 가게 부채는 어느 순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치명적이 된다니?

“우리나라는 금융권 대출중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55% 정도 된다. 주택담보 외의 기타 대출이 나머지 45%이다. 이 45% 중에서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37% 밖에 안되고 나머지 63%는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것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는 금리가 높고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면 은행보다 빨리 대출을 회수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주로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

—취약계층의 가게 수지는 어떤가?

“취약계층은 주로 적자가구라고 하는데, 예컨대 1분위 가게(소득이 하위 20%인 가게)의 60.6%가 버는 것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다. 쓸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뜻이다. 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다. 이자가 높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도 점점 커진다. 빚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료=통계청

—빛은 무한정 낼 수 없다. 그래서 빛 내서 빛 갚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빛을 내기 어렵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

“가계가 파산하면서 개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리고 빌려준 금융회사에 부실이 쌓인다.”

/조선일보 DB

—가계파산이 증가하면 정치적 불안과 민란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든지, 굶어 죽든지, 어차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청년들은 취직을 단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이렇게 가면 정치적 불안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있다.”

대출금 상환 연기는 미봉책

—대출금 상환 연기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은가? 상환이 미뤄질 뿐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거나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없으면 저소득층은 빛을 상환할 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이 이뤄지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돼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식당 외벽에 채용안내판이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정부가 만든 것들은 전부 알바(아르바이트) 수준 아닌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무리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늘려도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임금소득이 줄어드니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취약계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늘려야 가계부채가 해결된다. 결국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 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 부채의 심각성이 줄어든다.”

—정부 대책이 이러한 방향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나?

“너무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다. 현금을 주는데 급급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기업 발목 잡는 정부

조 실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한국경제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전세계적으로 탈중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공급망 구축 작업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점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정부가 밀어줘도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은 대전환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국내에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어려워니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취약계층의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요 산업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백악관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EPA 연합뉴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다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하면 가게 빛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해진다.”

정부부채보다 가게부채가 더 심각

조경엽 실장은 정부 재정 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비교해 물어보기로 했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중에 심각성을 따진다면?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정부부채는 미래 세대로 떠 넘길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현 세대에서 폭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를 잘 안하면 남유럽 경제위기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현상이 재발하면 이번에는 한국도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계부채는 그 때보다 심각하고 기업부채는 그 때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2월 외환위기 수습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이었던 휴버트 나이스(왼쪽)씨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유창우 기자

—가계부채 위기가 폭발했을 때 기업이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재정이 튼튼하면 부실한 금융회사를 지원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재정 전문가로서 볼 때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할만한 여력이 있나?

“현 정부 들어 정부채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닌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정부채무)가 1000조원이 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수치 기준이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부채, 연금보증 부채 등 정부가 사실상 갚아야 하는 부채까지 합하면 2019년 기준으로 2032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재정자금을 너무 많이 써서 국가채무가 폭증한 바람에 재정이 가계부채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다른 나라도 재정확장 정책을 쓰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은 모두 기축통화국가이다. 이들은 국가채무가 많더라도 국내경제 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나라 국채나 통화에 대한 수요가 국제금융시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채무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돈을 찍어 내거나 국채를 발행해 갚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원화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경제 위기 때 한국의 재정이나 민간 부문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한국 국채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다 팔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한국에 달려나 유로가 부족해 외채를 갚지 못하는 외환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재정 관리를 잘해서 대외신인도를 높게 유지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자금을 털어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미국도 현금 살포를 하고 있지 않나?

“미국이 현금 살포했다고 우리가 따라하면 안된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살포는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뿌려진 그 돈만큼 모두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떨어지고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줄 돈이라면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재기할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쪽은 인심 쓰는 정도로 찔끔찔끔 보상해주고 마는 것 같다. 어차피 재난이 닥치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해를 많이 본 쪽으로 돈이 안 쓰이고 인기 영합적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을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 사태 지원 자금은 정부 규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어느 대선 주자가 가계부채 해결할까?

시계가 오후 3시 30분을 넘어섰다.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조경엽 실장은 인터뷰 첫 머리에 10월말 즈음에는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니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에 관해 물어봤다. 그는 대선 주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복잡적이다. 현재 경선을 벌이고 있는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꼽는다면?

“현 정부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든지, 부자 증세를 바탕으로 주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주장하는 후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이다. 듣기는 좋지만 결국 주택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고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세입자 모두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 있는 사람 돈을 걸어서 없는 사람 준다고 하니 듣기는 얼마나 좋고 멋진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문제 해결에서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12명의 대선주자들이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주택은 생필품과 같은 것이니 일반적인 시장 논리와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시장이라고 해서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도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지, 감정 논리로 접근해서는 세입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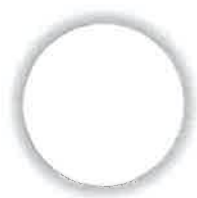
미국 금리인상 전에 움직여야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빚을 안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빚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서는 안된다. 부채보다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소

득을 늘리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인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부실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대신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반시장 정책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접근해 시장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고쳐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다른 요인이 방아쇠가 되어 한국경제에 총체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지난 9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기 직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김기훈 기자

 [①/②로 되돌아가 보기](#)

(‘되돌아가 보기’ 아이콘이 작동하지 않으면 검색창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을 입력하세요.)



김기훈 기자 경제전문기자